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사회문화 변동 : 전통사회의 해체와 시민사회의 성장*

백영서**

- I. 문제제기
- II. 아시아 개념의 정치화
- III. 동아시아에서의 중산층의 대두와 시민사회론
- IV. 동아시아의 가치관과 대중문화 교류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를 동남아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잡고, 이 지역에서의 중산층의 대두로 도래하는 사회문화 영역의 역동성을 해석하려고 했다. 특히 동아시아의 시민사회를 필자는 '민간사회'란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전통성과 근대성이 결합하는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중산층이 갖는 국가에의 의존성과 그로부터의 자율성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단서로 삼고자 했다. 또한 이것을 민주주의의 전망과 관련해 좀더 깊이있게 규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 내지 가치관을 고찰했다. 먼저, '아시아적 가치'론이 동아시아 중산층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데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글로벌리즘의 영향 속에서 그들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동아시아발 대중문화를 동아시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케 할 문화적 자원으로 주목하면서 대중문화의 상상력과 비판의식의 결합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주제어 민간사회, 시민사회, 대중문화, 중산층, 社團

* 이 논문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 학문육성 인문사회과학(지역연구) 연구비 지원 (과제번호: KRF 072-BL2058)으로 이루어졌음.

**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문제제기

20세기 후반에 중국, 일본, 한국 및 동남아 국가들이 이룩한 후발 근대화의 성과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들이 표출된 1990년대의 위기의 양면을 ‘아시아’라는 어휘만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드물다. ‘IMF위기’가 엄습하자 아시아는 청송에서 모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모멸의 시선에 대해 그 당시에조차 비판적인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간지 칼럼에서 한 정치학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도성장의 견인차로 칭송됐던 바로 그 아시아적 가치가 경제위기를 가져온 주범으로 성토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의 성공담은 옛 이야기가 됐다”으니 동아시아식 낡은 틀에 내재된 결함을 찾아 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혁백 1998).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여론을 대변이라도 한듯, 일부 부정적인 요소를 “마치 아시아적 가치의 전체인 양 몰아세우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어려운 때 일수록 주체성을 견고히 하자는 독자 발언이 곧바로 이어졌다(중앙일보 1998/06/22).

당시 해외에서도 “아시아적 가치의 어두운 면이 기적을 영망으로 만든다”는 식의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그 표적으로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지목되었지만, 그간의 성장의 원동력을 쉽사리 포기케 하는 IMF 처방의 무모함을 지적하거나(Robert Wade & Frank Veneroso 1998) ‘아시아의 미국화’가 대안일 수 없다면서 ‘아시아적 가치의 부활 가능성’을 예상하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제기되었던 것이다.¹⁾

그 같은 논란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공과(功過)를 따져보는 일이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관점의 차이를 가르는 열쇠

1) 『한국경제』, 1998년 7월 18일자에 소개된 도널드 에머슨의 주장. 아시아가치 옹호자는 아니지만 아시아모델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로는 『한겨레신문』, 1997년 12월 9, 10 일자에 실린 윌슨 벨로의 글을 참조.

임을 확인시켜준다. 'IMF위기'를 '졸업'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사태로부터 어느 정도 비껴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과제를 정면에서 검토하기에 적절한 때이지 싶다.

이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큰 작업의 일부인 이 글에서는 먼저 (동)아시아란 개념을 정리하고, 이 지역의 발전과 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사회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주로 1980년대 이래 이 지역에서 두드러진 사회변동의 특징인 중산층의 대두가 정치발전에 대해 갖는 함의를 시민사회 개념의 적용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전통적 맥락을 중시한 용어인 '민간사회' 개념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중산층의 시민사회의 장래를 민주주의의 신장이란 관점에서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 내지 가치관(예컨대 시민의식의 형성 정도)에 대해 고찰이 불가결하므로, 먼저, 동아시아 중산층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데 영향력이 큰 담론인 '아시아적 가치'론(주로 유교자본주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글로벌리즘의 영향 속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발 대중문화가 동아시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케 할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는지 따져보려고 한다. 이로써 21세기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아시아 개념의 정치화

우리에게 낯익은 동아시아란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어원부터 간단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보통 아시아(Asia)는 고대 서구인의 공간적 경험 범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 어원은 '일출(asu)' 또는 '해 뜨는 곳(asia)'이라 할 수 있으니 그들이 접촉한 에게 해 동쪽 지방을 뜻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것은 처음부터 ‘일몰(erebu)’이나 ‘해 지는 곳(Europe)’과 서로 상보적이어서 양자가 어우러져야 ‘세계’가 완성되는 실체였다는 것이다(伊東俊太郎 1998). 대략 15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를 거쳐 오늘 우리가 위치한 지역인 동아시아까지 아시아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이 지역은 서구의 중심이 영국일 때는 극동(Far East)으로, 2차대전 후 미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나서는 ‘동아시아’로 불렸다(김경일 1998, 29-33). 그런데 1970년대 중반 들어서 미국이 아시아 대륙 연안의 성장하는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관철하기 동-동남아시아를 재평가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배제하는 형식으로 ‘구미태평양권’을 기획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이란 연칭 어휘가 주목받게 되었다(아리프 딜릭 1995).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당사자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을까. 한자문화권에서 이 지역을 가리키는 어휘로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동양’(東洋)이다. 그런데 전통시대 중국에서 사용한 동양(및 서양)은 ‘큰 바다(洋)’를 기준으로 한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란 뜻이었다. 그 가리키는 대상은 중국인들이 지리적 경험히 확대됨에 따라 변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동양·서양 개념처럼 문명의 우열을 가르는 가치판단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밖에 아시아란 용어는 명말 예수회 선교사들이 세계지도를 소개하면서 지리적 명칭으로 도입했는데 청말까지 지도상의 대륙 명칭이었을 뿐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단지 눈여겨볼 점은 아시아가 왜 ‘亞細亞’ 즉 버금아-가늘세-버금아라는 의미상 멸칭에 가까운 한자로 음역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근의 한 연구는 아세아를 ‘Inferior-Trifling-Inferior’의 뜻으로 영역하면서 아세아라고 음역한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 관리들이었고 중국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아시아를 위치시키는 발상에서 선택한 표기라고 추리한다(Pekka Korhonen 2002).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 아시아 지역을 전과 다른 새로운 눈, 즉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할 연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출현했다(백영서 2000, 48-66). 그러나 아무래도 중국

인에게 아시아란 공식적인 지리적 용어이긴 하나 문화적인 내포를 강하게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아시아’ 그리고 ‘동양’에 비해 오히려 더 긴 역사적 배경을 갖는 어휘는 바다(洋)가 아닌 땅(方)을 기준으로 한 방위 개념인 동방인데 이것은 서방과 상대적인 개념이자 동방문화의 중심인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눈을 돌려 일본의 용례를 살펴보자. 세계를 야마토(大和, 일본)와 카라(唐, 중국) 및 텐지꾸(天竺, 서양)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해온 전통 시대 일본에서 아시아란 개념을 도입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그들은 서양의 세계관을 수용해 중화문화를 상대화하는 데 이용했다. 즉 중국을 ‘支那’로 지칭하고 일본과 나란히 ‘亞細亞’를 구성하는 일개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蘭學者와 國學者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중화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아시아 개념에는 이렇듯 일본중심주의적 성격이 깔려 있었다. 이 점에서는 명치유신 이후 문명론적 기준에서 우월하고 진보적인 서양에 대비되는 열등하고 낙후된 동양 개념을 창안하여 탈아입구하는 일본의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한 사정과도 통한다(스테판 다나카 1995). 이 같은 지역 개념이 우리의 의식·무의식 세계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용례들의 검토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역적 개념은 지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의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창안물’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을 동아시아라 명명할 때는 지리적 범위에 속할 대상보다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 유용성을 말하려는 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필자는 ‘동아시아’란 개념을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것으로 쓰려고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는 대만을 포함한 중국, 한반도, 일본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이것을 협의의 동아시아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런데 필자처럼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로 쓸 경우 유교문화권 내지 한자 문화권으로서의 일체성이 다소 약화될지 모르나,

점차 경제적으로 밀접한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는 이 지역의 현실과 연동하여 정치나 안전보장 영역까지 결합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를 담아낼 수 있다. 더욱이 동남아를 끌어안음으로써 동북아 위주의 지역경제 공동체가 설립되더라도 ‘초대형 공룡’이 되어 다른 지역의 민중과 지구환경에 재앙이 될까봐 우려하는 ‘동북아중심주의’의 혐의를(백낙청 2001, 33). 배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달리 말하면, 발전경로를 달리하는 다양한 문명적 요소를 지닌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지역의 위계구조 속에서 ‘주변’의 시각을 확보해 동아시아의 ‘중심’—그것이 중국의 ‘위협’이든 미국 패권 및 그에 동조하는 하위파트너인 일본이든—을 비판하는 거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백영서 외 2004).

III. 동아시아에서의 중산층의 대두와 시민사회론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를 넓은 의미로 잡고,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연출하는 현실의 다층적 시공간성을 좀더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아시아란 분석단위를 중시하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문화 변동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할 때 부각되는 현상은 무엇일까.

1980년대 이래의 동아시아 사회 변동의 지표로서 그동안 가장 많이 주목받은 것은 아시아의 중산층 또는 ‘신흥부자’(arriviste middle class)의 대두이다. 경제발전이 앞선 일본이나 그보다 좀 뒤늦은 NIEs는 물론이고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을 포함한 전지역에서 80년대 이래 (시차는 있지만) 중산층의 대두는 공통적이다.

동아시아 중산층 전체를 비교고찰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자. 1980년대 후반부터 공업 상업 등의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도시의 신중간층이 극적으로 확대했다. 신중간층의 출현은 연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다. 신중간층의 사회적 기반인 민

족자본의 형성의 취약성, 사회적 기원의 다양성, 권력이나 화교대자본 및 외국자본에의 의존성, 정치적 무력, 무지향성 등 주로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 변화의 중심적인 내용이 중간계급의 출현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가 공유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오면 이슬람화가 두드러지면서 신중산층의 사회적 의의는 한층 더 증대했다. 신중산층의 기반으로서 이슬람을 사회윤리로 하는 시민사회 건설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래의 그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는 국민생활에서 생활양식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소비생활의 구미화, 특히 패션이나 기호, 스포츠나 레저활동의 구미화였다. 한편 물질적 생활의 개선은 다양한 자원활동이나 자기실현, 교양프로그램에의 참가를 촉진했다(中村光男 1994).

이것이 동남아 한 국가의 현상이지만, 사실은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전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그들의 특징은 “벼락부자의 뿌리뽑힌 불안과 그로 인해 안정을 보장해줄 정치적 사회적 끈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시민사회는 형성되고 있지 않은 대신 이뤄진 정치변화란 “벼락출세한 중산층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듦으로써 정치적 통제를 완화하려는 보수적이고 관리적인 전략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David Martin Jones 1997, 149, 161).

사실, 동아시아에서의 중산층의 역할을 논쟁적이다. 맥도널드 햄버거와 핸드폰으로 상징되는 생활양식을 즐길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그들의 출신배경도 다양하고 자기정체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와의 관계가 단선치가 않기 때문이다. “맥도널드를 매일 사먹는 것이 곧 민주화운동”이란 말도 있듯이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사적 경제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그들이 사회를 개혁·개방시켜 정치적 억압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면도 인정된다. 동시에 그들은 고도성장의 혜택을 즐기기 위해 권위주의적 권력과의 타협도 서슴지 않으며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한 채 사적 영역에 안주해 소비문화를 즐기는 ‘기술·경력지향적인’ 집단이기도 하다(Niels Mulder 2003, 9-10).

이처럼 대립적인 해석을 넘어서 이 지역의 중산층의 대두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는 길은 없을까. 이 과제를 풀기 위해 아래에서 필자는 동아시아에서의 중산층 가운데 비교적 국가에의 의존성이 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중국대륙 중산층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중국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구)중산계층은 보통 간부, 보통 지식분자, 국유기업의 노동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들이 1980년대 이후의 개혁개방정책이 초래한 산업구조의 변화 즉 중공업 제조업에서 신흥하이테크로 산업의 중점이 옮겨가면서 몰락한 대신에, 신중산계층이 성장했다(鄭杭生 2002). 그들은 현재 약 1억 명으로 추정된다. 주요 직종에는 행정관리자, 전문기술자, 서비스업관계자 점원, 화이트칼라, 교사 등이 포함된다. 2001년 7월 현재 중국국가정보센터 연구자는 “이로부터 5년 간 중국에서는 약 2억 명의 인구가 중산계급에 속하는 소비그룹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이대로 실현된다면 정말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가 아닐 수 없다(朱建榮 2002, 4).

중국에서의 ‘중산계급’의 생활수준에 대한 정의는 “안정된 수입이 있고 자력으로 집과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수입의 일부를 여행이나 교육에 소비하고 대부분의 가정은 휴대전화, CD플레이어, 비디오 CD플레이어, 텔레비전, 게임기, 카메라를 소유하는 그룹을 가리킨다.” 여기에 실제의 경제 생활조건이 ‘중산계급’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과거나 주위에 비교해 생긴 일종의 자기평가를 가리키는 중류의식 소유자까지 포함하면 중간계급과 중류의식을 가진 전부를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지역에서는 6, 7할, 농촌에서는 4, 5할이 중류의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중류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사회 대부분이 중류의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²⁾

2) 여기에 신흥부자라고도 불리는 고소득자를 따로 구별해보면, 일부의 신흥 산업(금융

과거 20년간에 급속히 확대해 도시부와 연해부에 집중 거주하는 특징을 가진 그들은 교육 수준이 높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 역시 동남아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쟁적이다. 먼저 낙관론을 보면, “중산계급이 중대하고 빈곤인구가 중간층에 수렴되면서 그들이 중국의 정치나 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추세는 시민사회의 형성을 강력히 촉진해갈 것이 틀림없다”고 전망한다(朱建榮 2002, 13). 말하자면, “중국은 이제 시민사회의 입구에 도달”하여 그로 향하는 준비단계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는 중산계급의 확대, 납세제도의 도입과 ‘납세자의식’의 정착 및 공산당지도부의 통제력 약화 등으로 본다. 이 관점에 서면, 중국은 일극구조에서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이 권력을 삼분하는 다극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된다(朱建榮 2002, 26-27).

이와 달리 비관론에서 보면, 중국에서 중산계급이 형성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된 원인은 중산계급에 의해 점유되어야 할 자원이 “총체적 자본(문화자본 정치자본, 경제자본을 장악한 총체적 자본엘리트집단)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이다”(何清漣 1998, 352). 따라서 “사회의 중간조직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들 조직은 실제 반드시 서방사회와 같은 중간조직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조직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역할은 시민사회 같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기능 행사를 대표할 뿐이다(何清漣 1998, 350).

이 같은 대립되는 시각이 병존 내지 교차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면, 급속히 발전 변화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양극단적인 현상이나 데이터가 동시병존하게 마련인 거

증권 정보산업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에 집중한 사영기업경영자, 외자계 기업이나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고급직원, 부동산업자, 일부의 개인경영자, 일부의 국영기업의 청부업자나 기술을 갖고 경영에 참가하는 자, 유명한 배우나 가수 등 스타 모델 작가 스포츠선수, 일부의 변호사, 브로커, 회계사, 유명한 경제학자, 정부의 국장급 간부, 일부의 위법경영자(밀수 매춘), 소수의 부패인사 등이 해당된다. 약 1천만 명에 달한다고 보기도 한다.

대한 중국이란 특징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양극단을 넘어서기 위한 방편으로 요즈음 주목되는 중간조직인 社團의 기능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로 일반적으로 지목되는 공공성과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다.³⁾

사회주의체제의 중국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치체제상의 통로는 행정관료기구와 기초적 사회조직인 ‘單位’이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개체호나 사영기업의 출현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출현을 전자가 다 감당할 수 없고, 후자는 주관 기관의 분할과 동류구성원간의 횡적 연결의 결핍으로 인해 구성원의 다양한 관심을 수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단이 ‘제3의 통로’로 증시되고 있다.

여기서 사단이란 정부에 등록된 단체를 가리킨다. 이것은 사단의 활성화가 정부의 사회단체의 자율화촉진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뤄진 사정을 주목하게 한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다양화를 당과 정부가 직접 장악하려면 예전처럼 업무주관단위와 밀접하게 연계시켜 사실상 당-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정부재정부담이 증가하기 마련이므로 재정적으로 ‘작은 정부’를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정부를 보완하는 ‘중개조직’으로 사단을 증시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방식의 치리(治理)’를 도입한 셈이 된다(이남주 2003, 252). 그런데 사단의 활성화가 정치의 자유화나 권력의 다원화를 촉진시켜 ‘대사회’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사단은 ‘통제와 자율의 딜레마’에 처한 중국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渡邊剛 1999).

이처럼 국가와 사회의 관계 변화의 향방이란 큰 문제의식에서 사단

3) 아시아 시민사회 비교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구성요소에는 자발성, 시장과 대비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 시민의 능동성, 공동선, 공공성, 공적인 포럼, 결사체적 삶의 양식, 인권, 인도적 관심 등이 있다(조효제 2003, 23). 이 글에서 중시한 공공성과 자발적 결사체는 이들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을 조명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사단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각에서 사단의 역할을 다시 보면(王穎·孫炳耀等, 85-136), 사단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들 개인보다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새로운 사회보호장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인의 일상생활의 기초 사회조직인 단위와 달리 사단은 동류의 구성원간의 조직으로서 단위의 경계를 넘어서 동류의식을 만들낼 수 있는 기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회역량을 대표하는 조직이므로 여론에 호소한다든가 당·정부와 협상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이 정부와 벌이는 협상은 기본적으로 사단의 지도부가 정부와 여러 가지 연결장치를 마련해 접근하는 형태를 취한다. 물론 사단의 유형별 구별 즉 관주도형이나 半官半民型이나 아니면 민간주도형이나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형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단의 주류적 형태인 반관반민형의 경우 지도부 일부가 인민대회나 정치협상회의 등 정치기구에 참여하든가, 관련부서의 정책 자문에 응하는 방식이 흔히 이용된다. 바로 여기서 關시(關係)가 중시될 것을 당연하다.

이렇듯 ‘대사회’를 예상케 하는 근거인 사단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연결망인 關시가 활용되는 현상은 사단의 일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특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손쉽게 ‘사회주의적 시민사회론’(渡邊剛 1999, 88)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이것은 시민사회란 개념의 외연을 확대한 나머지 별다른 설명력을 갖지 못하기 십상이다. 이보다는 토착적 시민사회론의 전개 가능성이 대해 고려해보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전에 발표한 다른 글에서 중국에서는 ‘시민사회’ 대신에 ‘민간사회’란 용어를 쓰기를 제안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官과 靑을 이뤘던 민간이란 어휘가 전통적으로 가리켜온 내용과 civil society가 가리키는 내용의 차이와 공통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기호로서 활용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한 주된 이유는 시민사회가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좁

은 의미로 쓰이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말하자면 시민=부르조아지의 사회로 한정시키질 않고, 하머마스의 공공영역이 제시한 내용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공공문제의 논의에 참여하는 사회(특히 직능별) 집단의 자율적 결집의 영역을 민간사회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서구의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립한 공동의 영역인데 비해 민간사회는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립 지향과 동시에 그것의 보완 지향을 갖는 영역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국가와 (민간)사회를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양자가 공통의 이념을 공유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핵심적 주장이었다(백영서 2000, 106-107).

이 관점의 연장에서 필자는 중국의 중산층 대두와 더불어 그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 사단의 역할을 ‘민간사회’ 영역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이로부터 더 나아가면 동아시아의 중산층이 갖는 국가에의 의존성과 그로부터의 자율성의 양면성도 동아시아의 민간사회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⁴⁾

그런데 이처럼 동아시아 중산층이 구성한 사회(와 국가의 관계)의 특성을 민간사회의 개념으로 파악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신장이란 관점에서 그것의 장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 내지 가치관(예컨대 시민의식의 형성 정도)에 대해 고찰이 불가결하다.⁵⁾

4) 사실 이런 주장은 근대성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게 마련이다. 즉 토착적 시민사회를 말하다보면 다원적 근대성의 일부인 ‘중국적 근대성’으로 파악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전통이 부정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근대화에 적응하고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중국 독자적인 근대성을 추출해내고 있지만, 문화적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비판(Bergere 1997, 328)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적 시민사회 또는 민간사회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함정이 있을 수 있다.

5) 동아시아의 민주화는 중산층의 규모의 확대로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과의 동맹에 의해 이뤄낸 성과란 타이 활동가의 지적은 귀 기울여야 한다(박은홍 2003, 219). 따라서 동아시아 민간사회를 전망할 때도 민간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의 타협과 갈등을 분석해야겠지만, 이 과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IV. 동아시아의 가치관과 대중문화 교류

동아시아인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틀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로 이름 붙여진 유교적 가치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8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아시아적 가치’론⁶⁾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이념적 공백기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부 아시아 국가의 성취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환영받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오염된 개념이란 비판받기에 학계에서는 덜 주목받았다. 이에 비해 아시아의 여러 가치 가운데 유교적 가치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파악하는 유교자본주의론은 좀더 명료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학자들의 지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여기서는 이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유교자본주의라는 이름은 미래학자 허만 칸에 의해 붙여졌다고도 하지만, 계보상 처음으로 그 윤곽을 그려보인 것은 중국학자 맥파커(Roderick MacFarquhar 1980)로서 그는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인 공통점에 착안하고 그것을 ‘후기유교 집단주의’(post-confucian collectivism)라고 규정했다. 그가 보기에, 유교는 서구의 자본주의 흥기와 프로테스탄티즘의 결합만큼이나 대량 산업화 시대 동아시아의 초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핵심은 국가의 응집력이었다. 그런데 유교자본주의론의 골격이 간명히 제시된 그의 글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의식은 그 제목이 말하는바 ‘후기유교의 도전’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전력에 걸맞게 중국과 일본을 축으로 운집한 동아시아블록의 서구에 대한 위협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6) 유교윤리에 기초한 아시아적 가치 제창이 1980년대 들어 싱가포르에서 본격화되었는데, 그 절정은 1991년 1월에 정부가 발표한 ‘국민공유가치백서’에 담겨 있다. 그 골자는 1)사회보다 국가,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한다, 2) 사회의 기초단위는 가족이다, 3) 개인은 사회를 존중하고 지탱한다, 4)갈등보다 합의가 중요하다 5)종족적·종교적 조화를 유지한다는 5개 항목을 국가이념으로 삼은 것이다(天兒戀 1998, 5, 6장).

그가 제시한 윤곽을 이론적으로 풍성하게 해줘 자주 인용되는 사회학자 피터 버거 역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적 성취를 설명해주는 핵심변수를 ‘후기유교윤리’로 파악했다. 그것은 전통시대 관료의 본래적인 ‘고급’ 유교로부터 괴리되었지만 더 넓게 확산된 하층문화이다. 유교경전을 읽거나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의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그런 것이다. 그 세부항목으로는 세속사에 대한 긍정적 태도, 규율잡혀 있고 자기계발적인 생활태도, 권위에 대한 존경, 검소, 안정된 가족생활에 대한 질은 관심이 거론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같은 유교적 요인만을 중시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불선(儒佛仙)이 혼합된 민중의 종교생활인 하층문화에서 ‘아시아적 근대성의 정신’을 찾고자 했다(Peter L. Berger 1988).

유교를 유달리 강조하면서 그로부터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까지 끌어내 유교의 ‘전도자’라 불릴 정도인 중국철학자 두 웨이밍(杜維明)은 유교자본주의론의 전파에 영향력이 컸다. 그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을 구미 자본주의 유형이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유형과 구별되는 ‘세 번째 공업문명’으로 규정하고, ‘후기 유가사회’라는 문화에 기반한 동아시아모델에 보이는 ‘신유교’를 서구의 근대를 넘어설 인류의 새로운 발전대안, 즉 자본주의의 정신적·생태적 위기의 해독제가 될 ‘영적(靈的)인 것’으로 전망한다(두 웨이밍 1995). 두 웨이밍이 품은 유교의 세계사적인 역할에 대한 구상에서 아시아인이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른다.⁷⁾

이 같은 유교자본주의론에 대해서는 그 유행과 맞먹는 비판이 있어 왔다. 아시아 여러 나라를 유교로 묶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든가 문화

7) 우리 사회에서도 그 반향이 일정하게 있다. 한 예를 들면, 유교자본주의론의 옹호자인 함재봉은, 유교가 “비록 이념과 제도의 차원에서는 의식적으로 배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는 판단 아래, “탈냉전과 탈근대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상적 작업은 근대와 전근대 사상의 충돌구조를 살펴보고 그것을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일 것이다.”고 주장한다(함재봉 1997).

와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를 단순하게 파악하다보면 문화결정론에 빠지기 쉽다는 등의 비판은 길게 다룰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논의되었다. 필자는 여기서 그것이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출현한 변화 속에서 그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싶다.

사실 동아시아 역사에서 유교의 부활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1980년대에 그만한 반향을 일으킨 것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변동으로 설명해야 옳을 것 같다. 즉 구미 산업사회가 쇠퇴하고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데 비해 동아시아가 예외적으로 성장하자 그것을 통해 구미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활력과 확대를 꾀하기 위해 그 성공의 비결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러니 유교자본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비판도 결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지점에서 미국이란 중심부에 진출한 중국계 학자가 탈근대적 사업으로 유교를 장려하여 자본주의를 위한 자료제공자이자 문화적 기술자로서 소비하기 좋은 상품처럼 유교자본주의를 ‘제조’했다는 비판에 귀 기울일만하다(Arif Dirlik 1995).

그런데 유교자본주의론이 말하는 새로운 문명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기반하되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그것의 폐단을 다소간 극복하려는 복수의 자본주의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형을 목표로 삼은 데 한정된다면, (그것이 진정 새로운 문명일 수 있나 하는 의문은 들지만) 위의 비판으로 유교자본주의론이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결정적인 타격은 이론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현실로부터 왔다. 통화 위기 한파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 사태야말로 유교자본주의론을 “서구의 유교찬양론과 유교재발견의 깊은 고민이 없는 또다른 수입”으로서 “지적 식민성 비판이론의 지적 식민성”이라고(손호철 1998, 157) 야유하게 만든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유교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유교자본주의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단언했다. 이 모델이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과거에 발전을 가능케 했던 근검절약의

정신과 공무원과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교자본주의의 추진체인 국가와 기업이 세계금융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일찌감치 감지하고 대처하지 못한 것이 위기의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된다(함재봉 1998).

여기서 유교자본주의론이 아시아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제도적인 분석과 보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모델의 유효성 여부를 따지려면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측면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그중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유교자본주의를 제도적으로 설명하려는 측은 그 특징을 국가관료화 시장을 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로부터 역동성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가 경제발전의 추진력인 재벌을 지원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부당한 유착’의 혐의에 대해서 기업이 아래와 같은 두 기준을 충족시키면 정당하다고 본다. 즉 재벌이 국내적으로 특혜를 받는 대신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보이고 국내시장에서도 최소한의 경쟁력(시장메커니즘)을 유지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특혜가 집중되는 것이 부당한 유착 즉 부패이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물론 그도 부당한 유착과 정당한 결합을 구별해냄으로써 유교자본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기제로서 국가의 견제세력인 언론과 지식인(특히 학생)의 비판적 역할을 중시하긴 한다(유석춘 1997).

그런데 그가 국가관료를 학자관료의 연장, 언론과 지식인을 ‘언관(言官)과 사림(士林)의 현대판’이라고 보는 식으로 전통적 역사구조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유교와 자본주의의 조화가 이미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자세히 따지고 들면 ‘발전국가론’에 유교적 덧칠을 심하게 한 것일 뿐이란 느낌이 강하게 든다. 굳이 유교란 문화적 요소를 끌어들여 그 타당성을 논증하려다 보니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더 따지고 들면, 유교자본주의에서 들먹이는 주요 덕목들이 과연

유교' 인가도 질문할 수 있다. 그것이 중국이나 우리의 과거에 존재했던 일부 문화적 현상들을 '유교'라 이름 붙이고 동질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나머지를 은폐한 것이기 십상이다. 결국 (위에서도 보았듯이) 유교 자본주의 옹호자들의 '유교'는 그들이 '제조한' 상품인 셈이다(Arif Dirlik 1995, 261). 물론 전통문화가 고정되거나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창안된 것(invention)이란 견해도 있느니 만큼 그 자체가 문제시될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과거의 문화유산에서 무엇이든 끄집어내 활기를 불어넣어 마땅하다. 핵심은 '누가' 전통의 '어떤 측면'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이다(이승환 1999, 328). 이 점에서 볼 때,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자기 이외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수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독재국가의 정치가들이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동원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 즉 경제성장을 통해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해나가는 '연성권위주의'의 이념이란 비판은 귀기울일 가치가 있다(이승환 1999, 327; 전제국 1999).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 중산층의 가치관을 유교자본주의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고 본다. 이 같은 판단은 동아시아인의 가치관 내지 문화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예를 들면, 적어도 동남아시아에서는 핵가족 위주인 '개인 중심성' (individual-centeredness)이 지배적인 가치이므로 아시아적 가치론의 중요한 논점인 집단주의가 '오리엔탈리즘적 신화' (orientalizing myth)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Niels Mulder 2003, 225-227). 이처럼 동아시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향유하는 대중문화를 보면, 문화본질주의에 기대는 보수적인 아시아적 가치론과는 거리가 멀고, 같은 문화전통을 가진다는 식의 배타적 견해가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 듯이 보인다. 대중문화는 이질적인 뿌리가 섞이는 가운데 통합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岩瀬功一 2001, 14, 309).

그런데 아시아 전체로 보면, 베이징에서 이스탄불까지 아시아의 성

장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미국발 대중문화의 바람에 휩쓸려 생활양식이 서로 닮아가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아시아의 대중문화(그것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B급의 상업주의문화)의 이차적 복사물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맥도널드 햄버거가 유행하는 것을 ‘문화적 제국주의’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소리도 귀기울여야 한다.⁸⁾ 소비주의와 전자통신 기술의 진보로 인해 문화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가는 아시아 나라들의 (신) 중산층 세력은 미국화(서구화)된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문화 유통망을 통해 국경을 넘어선 그 나름의 대중문화적 취향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특징을 ‘참된 아시아의 탄생’(이와부치 코이치 2003, 100)이라고까지 규정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글로벌리즘의 파장 속에서 실질성과 공통성을 갖는 새로운 대중문화가 아시아 맥락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이와부치 코이치 2003, 90).

그 구체적인 근거를, 1980년대 이후 대두된 중산층을 기반으로 확산된 대중문화에서 드러난 일본 대중문화의 영향,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한류(韓流)와 화류(華流, 華潮)가 그 일부인 동아시아발(發) 대중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아시아의 상호이해와 연대를 가져올 동아시아인의 정체성을 양성하면서 서양발 대중문화와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저런 류의 취향 공동체들이 좀더 다른 글로벌리제이션의 주체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조한혜정 2003, 41)고까지 해석하는 데 아직은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동아시아발 대중문화의 출현이라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현상을 계기로 동아시아인들이 기존의 국경과 이데올로기부터 상당히 벗어나 자신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적 정체성에 매력을 느끼

8) 동아시아인의 일상생활의 변화와 관련해 맥도날드의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동아시아인의 능동성을 분석한 인류학자의 작업을 보면,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상호교류의 실상도 좀더 깊이 분석할 필요를 느낀다(James Watson 2000).

고 새롭게 아시아를 상상할 길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편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아시아에서 교류되고 있는 대중문화 영역에서 가시화된 상업주의 및 자민족중심주의⁹⁾를 부추기는 수출국들과 수입국들 간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의식과 대중문화의 상상력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¹⁰⁾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를 동남아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잡고, 이 지역에서의 중산층의 대두로 도래하는 사회문화 영역의 역동성을 해석하려고 했다. 특히 동아시아 사회를 필자는 '민간사회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미의 시민사회 개념을 기계적으로 동아시아에 적용하지 않고 전통성과 근대성이 결합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중산층이 갖는 국가에의 의존성과 그로부터의 자율성의 양면성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것을 민주주의의 전망과 관련해 좀더 깊이 있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 내지 가치관에 대해 고찰이 불가결하다는 판단에서 이 작업도 수행했다. 먼저, 동아시아인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틀로 가장 영향력이 큰 이른바 유교자본주의론이 동아시아 중산층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데 적절

9) 이와 관련해, 신윤환(2002, 29-30)이 동아시아에 유행하는 한류 담론의 오류와 편향으로 상업주의, 국가개입주의, 자민족중심주의를 거론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0) 대중문화 교류에 대해 필자는 일찍이 "이것이 동아시아 대중에게 일상적 삶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다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이런 경험이 동아시아인 서로의 삶의 문제에 마음쓰는 감수성 계발로 이어질 것인가. '비판적 지역 의식'의 매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백영서 2001). 이와 비슷한 입장을 이와부치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 상품에 체현된 "사적인 환타지를 비판적 역사인식과 결합시키고 자기변혁·사회변혁이란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이어간다는 낙관적인 개입의 의지를 계속 갖기 위해서도 트랜스내셔널한 상호연결·상화관통이 계속 조성하는 불균형에서 눈을 떼지 않고 비판적으로 대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岩淵功一 2001, 311).

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글로벌리즘의 영향 속에서 그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동아시아발 대중문화의 속의 상상력과 비판의식의 결합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그것을 동아시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케 할 문화적 자원으로 주목하였다.

이와 같이 전지구화의 영향 속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사회문화 영역의 역동성을 전통과 연관된 민간사회와 대중문화에 기초한 소비사회의 두 측면을 통해 파악하면서, 이 양자의 결합 양상, 더 나아가 이것과 국가(내지 정치사회) 발전의 쌍방향적 관계를 한층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해 아쉽다.

여기서는 이 과제를 좀더 진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과제 중심의 지식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지식체계의 일부로서 '비판적 동아시아학'이 편제되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제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전지구적 자본주의문명을 넘어설 대안적 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하지 않으면 이뤄질 일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단일한 자본의 문명이 세계를 에워싸고 삼켜버렸다는 경제적인 주장도 단순화와 수사의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쳐놓을 수 있”는 신념이 요구된다(페리 앤더슨 1996, 39). 자본주의 문명이 자본주의로서 자기완성하는 것이 곧 문명으로서 자기 부정하는 것이므로 그런 야만으로까지 가기 전에 “아직 남아 있는 문명적 유산들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지구문명을 건설”(백낙청 1996, 11)하겠다는 의욕을 품어야 한다. (이 글이 그 일부인 전체 공동연구의 목표라 할) 새로운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구축은, 새로운 문명으로 향하는 도정에서 “가까이에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문화들 속에서 투쟁을 지탱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그 지역 문화유산의 전향목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 이야말로 실현가능하면서도 유익한 일”(페리 앤더슨 1996, 39)임을 체득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창출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중산층의 대두와 그와 더불어 성장한 토착적인 시민사회의 성장을 ‘민간사회’란 개념을

파악하고 대중문화의 역동성을 증시한 이 글은 이 “지역 문화유산”의 한 항목을 적극적으로 의식하려 한 작은 노력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경일. 1998. “동아시아와 세계체제 이론.” 『정신문화연구』 21(1).
- 두 웨이밍. 1995. “유가철학과 현대화.” 정문길 외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박은홍. 2003. “동남아 시민사회의 형성과 진화: 타이 사례를 중심으로.” 권혁태 외 저. 『아시아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아르케.
- 백낙청. 1996. “새로운 전지구적 문명을 향하여: 한국 민중운동의 역할.” 『창작과 비평』 여름호.
- _____. 2001. “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 봄.
-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 _____. 2001. “대만 한국열풍.” 『한겨레신문』 6월 26일.
- 백영서 · 정문길 · 최원식 · 전형준 엮음. 2004. 『주변에서 보는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손호철. 1998.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 『경제와 사회』. 봄.
- 스테판 다나카. 1995.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정문길 외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신운환. 2002. “동아시아의 ‘한류’ 현상: 비교 분석과 평가.” 『동아연구』 42.
- 아리프 딜릭. 1995. “아시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 정문길 외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유석춘. 1997.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통과 현대』 여름.
- 이남주. 2003. “개혁개방 이후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추세와 전망: 중국 민간조직의 발전을 중심으로.” 권혁태 외. 『아시아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아르케.
- 이승환. 1999. “‘아시아적 가치’의 담론학적 분석.” 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 이와부치 코이치. 2003. “일본대중문화의 이용가치.”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출판부.
- 임혁백. 1998. “한국적 위기대응 모델.” 『중앙일보』 6월 15일.
- 전제국. 1999.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재평가.” 『동아시아비평』 2.

- 조한혜정. 2003. “글로벌 지각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출판부.
- 조효제. 2003. “아시아 시민사회 비교연구의 방법.” 권혁태 외. 『아시아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아르케.
- 페리 앤더슨. 1996. “문명과 그 내용들.” 『창작과 비평』 여름.
- 함재봉. 1997. “유교와 세계화.” 『전통과 현대』 여름
- . 1998. “여전히 유효한 유교자본주의.” 『교수신문』 7월 13일.
- 渡邊剛. 1999. “中國における統制と自律のジレンマ: 社會團體管理政策おめぐて.” 『東亞』 381(3月).
- 岩渕功一. 2001. 『トランスナショナル・ジャパン』. 東京:岩波書店.
- 伊東俊太郎. 1998. “アジアの定義, 意味.” 『アジア學のみかた』. 東京:朝日新聞社.
- 朱建榮. 2002. 『中國第三の革命』. 東京:中央公論社.
- 中村光男. 1994. “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新中間層の形成とイスラーム主流化.” 『講座現代アジア』 3.
- 天兒慧編著. 1998. 『アジアの21世紀』. 東京:紀伊國屋書店.
- 王穎・孫炳耀等. 1993. 『社會中間層』. 中國發展出版社.
- 何清漣. 1998. 『現代化的陷穽:當代中國的經濟社會問題』. 今日中國出版社.
- Arrighi, Giovanni. 1997. “Globalization and the Rise of East Asia: Lessons from the Past, Prospects and the Future.” <http://fbc.binghamton.edu/papers.htm>.
- Berger, Peter L. 1988.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Peter L. Berger and Hsin-Huang Michael Hsiao, eds.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al Model*, Transaction Books.
- Bergere, Marie-Claire. 1997. “Civil Society and Urban Change in Republican China.” *China Quarterly* 150 (July).
- Dirlik, Arif. 1995. “Confucius in the Borderlands: Global Capitalism and the Reinvention of Confucianism.” *Boundary 2* (Fall).
- Jones, David Martin. 1997. *Political Development in Pacific Asia*, Cambridge: Polity Press.
- Korhonen, Pekka. 2002. “Asia’s Chinese Name.” *Inter-Asia Cultural Studies* 3(2). August.
- MacFarquhar, Roderick. 1980. “The Post-Confucian Challenge.” *The Economist*, February 9.

- Mulder, Niels. 2003. *Southeast Asian Image: Towards Civil Society?* Silkworm Books.
- Wade, Robert and Frank Veneroso. 1998. "The East Asian Crash and the Wall Street-IMF Complex." *New Left Review*. March/April.
- Watson, James. 2000. "The Bic Mac in China: A New Culture?" *Foreign Affairs*. May/June.

Modernization and Change of Socio-cultures in East Asia: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Society and Rise of Civil Society

BAIK Youngseo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at Yonsei University

In this paper, I used East Asia as an enlarged concept of the region including Southeast Asia, and tried to configure the dynamics of socio-cultural fields of the region processed by the upsurge of the middle class. Particularly, I suggested a concept of “Minjian-shehui(民間社會)” in analyzing the upsurge of the middle class. The concept, I argued, can be a clue not only to find out the process of combining the traditional components with the modernization but also to explain two faces of the phenomenon the middle class possess, that is, the dependence on as well as independence(autonomy) from the nation-state.

In addition, I inquired into their consciousness or viewpoints to contemplate the dynamics more deeply in relation with the prospect of democracy. Firstly, I would point out that the discourse of so-called ‘Asian Values’ is not adequate in explanation of the values of East Asian middle class. And the second point I made is a possibility of cohesion between an imagination of mass culture and a critical consciousness, because I paid attention to the mass cultures of East Asia as the cultural resources to construct new identities of

the East Asian people, which is in the process of forming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sm.

Key Words : Minjian-Shehui, Civil Society, Mass Culture, Middle Class, Society